

제3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 
〔2023. 11. 22.(수) 10:00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3 - 127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6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### 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이 주민 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기준 변경(안 제2조)

-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‘200명 이상’에서 ‘150명 이상’으로 변경

나. 그 밖에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(주민감사청구) 및 제28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1.18. ~ 2023.2.7.) 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인 요건 완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‘주민감사청구 제도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‘200인 이상’에서 ‘150인 이상’으로 개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

-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 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‘200명 이상’에서 ‘150명 이상’으로 하향하고 기타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,
-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**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관한  
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 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**4. 작성자: 감사담당관 김 동 연**

(담당: 세무6급 김선옥 / ☎ 2600-6479)

## 「지방자치법」(2021. 1. 12. 개정, 2022. 1. 13. 시행)

### 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

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### 제28조(조례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